



족쇄풀린 JY, 해외 보폭 확대 지배구조 등 ‘뉴삼성’ 가속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부당합병’ 꼬리표를 떼내면서 경영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다. 삼성 경영 정상화는 물론 지배구조 개편 등 해묵은 과제 해결에도 물살을 탈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6일 김포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부당합병’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첫 출국이다. 이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를 시작으로 중동 지역과 동남아시아 등을 돌아볼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고 현지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삼성을 이끌기 시작한 2014년부터 구속 수감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명절 연휴마다 해외 현장 경영을 지속해왔다.

이재용, 설에도 해외 현장경영 행보 위기의 삼성 ‘터닝포인트’ 기대감

이달 이사회사 등기이사 안건 결정 경영 과제 해결 후 선임 가능성도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JY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명절을 타지에서 보내는 현지 임직원들을 직접 만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선물을 전달하는 등 격려 활동도 병행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앞으로 글로벌 경영 활동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사법리스크’로 해외 출장에 제약이 컸던 상황, 명절 연휴가 아니라도 자유롭게 해외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JY네트워크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한 장비 및 기술 확보는 물론, 네트워크 장비와 자동차 전자장비(전장) 수주를 이끌어내는 등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왔던 만큼, 위기에 빠진 삼성에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책임 경영 시작할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사내 이사에 오를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임명됐지만, 사법리스크를 겪으면서 2019년 10월 임기가 끝난 후에는 미등기 임원으로 활동해왔다.

등기 이사는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경



영 사항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이미 이 회장이 최고 경영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등기 이사가 되면 공식적으로 회사 경영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국내 4대 기업 중에서는 이 회장이 총수 중 사실상 유일한 미등기 이사다. 그동안 사법리스크와 함께 취임을 제한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으로 유죄를 받았고, 부당 합병 재판에서도 특경법으로 기소 당하면서 등기 이사 자격 논란이 있었다.

지금은 제한이 없다.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022년 특별 사면을 통해 취업 제한에서 벗어났고, 이번 1심 재판에서도 1심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걸림돌을 해결했다. 행동주의 펀드 등이 이 회장 복귀에 문제를 삼을 요인을 해결한 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책임 경영을 위해 이 회장 등기 이사 선임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명분이나 실리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다. 당초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한 탓에 무리한 조치였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가운데,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나왔는데도 항소까지 하기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으로, 이번달 중순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실적 반등 시급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은 후에 화려하게 등기 이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삼성이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 이 회장이 다시 실적을 끌어올리는 과제를 해결한 후에 등기 이사로 선임될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에서 15억 원 수준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일본 소니 등에도 영업이익을 역전당했다. 반도체 1위는 물론 스마트폰 출하량 1위까지 뺏겼고, 메모리 점유율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주력 사업 경쟁력에 위기감이 커졌다.

미래 사업도 불투명하다. ‘반도체 비전 2030’ 핵심 과제인 파운드리 사업 점유율 확대도 오히려 TSMC에 밀려 후퇴했고,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신사업에서도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3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생성AI의 예술시장, 연평균 40.5% 증가

창작 vs 합성물, 갑론을박 지속

AI, 새 창작 도구로 다양한 시도
저작권 논란 속 상품화 이르러
전자업계는 미디어아트로 호응
미술가들도 한계-가능성 시험

#. 2022년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로 제작한 작품이 디지털아트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예술의 정의와 AI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의 죽음”이라고 질타했다. 해당 그림의 작가인 제이슨 M. 앨런 또한 NYT와 인터뷰에서 “AI가 이겼고, 인간이 패배했다”고 냉소적인 답변을 했다.

AI를 활용한 그림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실험적인 작품들이 대부분이지만 AI를 새로운 예술 창작의 도구로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며 상품화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AI 작품은 저작권 논란을 떼지 못한 채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시장은 형성하고 있다.

7일 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22년 2억1200만 달러 수준이던 생성 AI의 예술 시장 규모가 연평균 40.5% 증가해 2032년 58억4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가트너 조사 결과 AI 참여 작품 비중은 2020년 1%에서 2025년 10%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LG전자가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인간과 AI 기술 사이의 소통과 공감을 담은 예술 작품을 올레드 TV로 선보였다. 관람객들이 올레드 에보(evo)를 통해 AI가 그린 미디어아트 감상은 물론, AI가 올레드 화면(왼쪽)을 통해 질문하면 마이크로 대답하며 소통할 수 있다. /LG전자

AI 예술의 성장에 전자업계는 호응하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AI 작품을 자사 제품에 탑재해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뉴스 뮤지엄 을지로점에서 공동으로 미디어 아트 전시회 ‘터치 더 리얼’을 열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북4시리즈의 AI 기능을 바탕으로 제작된 미디어아트를 소개하는 전시회다. 갤럭시 북4시리즈는 인텔의 첫 AI 프로세서이자 신경망처리장치(NPU)를 탑재한 코어 인텔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미디어 아트는 물론, 에세이와 디자인 작품까지 폭넓게 모았다.

배태원 인텔코리아 부사장은 “생성 AI 기술의 가치를 일반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삼성과 인텔이 함께 고민해왔다”며 “AI 기술이 예술가의 창의적 표현 폭을 넓히고 작업 효율성을 높이는지를 실험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물을 소비자에게 공유한 것이 이번 전시의 콘셉트”라고 말했다.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작품과 달리 기성 미술가들은 AI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실험하며 AI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AI 작품 전시회 ‘NFTENERGY’은 미래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했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올해 10대 제조업계 민간투자 110조

안덕근 장관, 산업투자전략 회의
현대차 등 10대 기업 CEO 참석
투자금액 지난해 대비 10% 늘어

올해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10대 제조업 민간 투자가 전년 대비 10% 증가한 11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해 밀착 지원하는 등 기업들이 원활한 투자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7일 오후 대한상에서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기업 투자 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장재훈 현대차 사장,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윤정원 셀트리온 사장 등 제조기업 10대 대표기업



CEO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 10대 제조업이 계획중인 주요 설비투자 금액은 총 110조원 규모로, 작년 100조원 대비 10% 증가했다. 정부는 글로벌 고금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남은 상태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등 업종별로 중요한 20대 핵심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산업부 과장급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매월 투자 프로젝트 상황을 모니터링해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전담

지원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과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통한 기존 규제 완화, 신설되는 규제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첨단산업영향평가’, 매년 규제 수준을 평가하는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등 ‘3대 규제혁신제도’도 추진한다.

〈2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



▲ 한동훈 “서울 편입-경기분도 양립 가능… 적극 추진 약속” /사진 뉴시스

▲ 민주당 “총선 후 서울 편입 주민투표하고 법안 통과시 봄 온다”

▲ 정부, 설연휴 보이스피싱 24시간 대응·전담 수사조직 신설

▲ 국방부, ‘병 인건비 인상’ 등 상반기 국방예산 집행점검



▲ ‘돈봉투 의혹’ 이성만 “검찰 기소는 명백한 정치 기소” /사진 뉴시스

▲ ‘반쪽짜리’ 사화대상공원 특위, 국회-민주당 갈등 여전